

“금감원 특사경, 자본시장·불법사금융 한정… 금융위서 관리”

이역원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2개 항목 외 특사경 적절치 않아”
3월 금융권 제도개선 방안 마련

가계부채 韓 경제 ‘핵심 리스크’
DSR 중심 여신관리체계 강화

이역원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관련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기보다, 특사경의 권한 범위를 넓히고 금융위가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사경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특정분야에서 ‘행정직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수사, 압수수색) 등을 부여해 행정법규 위반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특사경 권한을 전면 부여하기보다, 금감원이 신속대응해야 하는 자본시장과 불법사금융 권한을 확대하고 관리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란 취지다.

이역원 금융위원장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떤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 특사경 권한 확대… 금융위 통제 강화

최근 금감원은 금융위에 특사경 인지 수사권을 요구하는 ‘금감원 특사경 활



이역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안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용도 제고방안’을 전달했다.

현재 금감원 특사경은 자본시장의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의 전통적 자본시장 범죄에 한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자본시장의 범죄가 단일행위로 끝나지 않는 만큼 수사권을 회계부정·허위공시, 자본시장 연계 사기·배임 등으로 확대하고,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사경도 도입해달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과 관련한 수사권과 불법사금융에 대한 특사경 도입은 필요성이 인정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사경 논의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금감원 특사경에 대한 인지수

사권 부여와 민생침해범죄 중 불법사금융 분야에 한정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그 부분을 넘어서는 영역은 금감원에 특사경을 두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공권력, 권한 남용 우려 등을 통제하기 위해선 공공기관의 관리체계에서 받는 것보다 그에 상응해 금융위의 통제를 받는 편이 실효적이라고 했다.

그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공공기관 관리체계에서 통제를 받는 방법과 그와 상응해 어떤 주체가 통제하는 방법이 있다”며 “금융위라는 특수성도 있고, 금감원이라는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통제의 수준은 공공기관 지정이나 플러스 알파정도로 하되 방법은 주무부처가 하는 것이 실효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지배구조, CEO 연임 주주 통제 강화 검토

이날 이 위원장은 금융권 지배구조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배구조 선진화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3월 말까지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사회 독립성과 다양성, CEO 선임의 공정성·투명성, 성과보수 운영의 합리성 등을 축으로 개선택을 논의하겠다”며 “학계·법조계 등 전문가 의견과 해외 사례, 금감원의 실태점검 결과까지 종합해 법제화·제도화 가능한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CEO 연임을 둘러싼 ‘참호 구축’ 논란에 대해 금융위는 주주 통제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주주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은행지주 CEO 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외이사 단일제와 같은 쟁점도 “아이디어로 올라오면 함께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TF가 특정 금융지주나 개별 사안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냐는 질문에 “특정 케이스에 맞춰 제도

를 설계하는 것은 아니며, 제도 개선 자체가 앞으로의 기준이자 시장에 신호를 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 가계부채, DSR 확대·총량 관리 고삐

이 위원장은 가계부채를 한국 경제의 핵심 잠재 리스크로 규정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중심으로 한 상환능력 기반 여신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현재 신규 취급 대출 가운데 DSR이 적용되는 비중이 40%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DSR 적용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은 분명하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시점은 시장 상황과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총량관리 기조도 한층 강화한다.

금융위는 2026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통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2025년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이 약 1.8% 수준에 머문 점을 감안해, 이를 하회하는 관리 목표를 설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총량 관리는 경상성장률(명목 GDP 성장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며 “가계부채가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저축銀, 부실채권 정리·투자 확대… 자산구조 재편

업계, 이역원 금융위원장 간담회에서
유가증권 투자한도 규제완화 요구
1050억 규모 부실채권 매각 예고

저축은행이 부실 자산을 정리하고, 유가증권 투자 확대를 추진하는 등 본격적인 자산 구조 재편에 나서고 있다. 쌓여가는 부실 채권은 정리하는 동시에 투자 채널을 다각화함으로써, 약화된 수익성을 회복하고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들은 내달 있을 이역원 금융위원장과 의 간담회에서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 한도 규제 완화를 요구할 예정이다. 수익 다각화를 위한 본격적인 판로 확대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

은 자기자본 100% 이내에서만 유가증권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 단,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해 자기자본 규모 등을 고려, 유가증권 종류별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실제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동안 유가증권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유가증권 총잔액은 지난 2024년 12월 말 8조9269억원에서 지난해 3월 말 9조618억원, 6월 말 10조4462억원, 9월 말 12조4722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수익 실현을 위해서다. 저축은행 유가증권 투자 중 단기매매증권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9416억원에서 9월 말 기준 1조6622억원으로 증가했다. 분기 사이에 약 77%나 성장한 것이다.

같은 기간 매도가능증권은 8조2805

억원에서 9조4378억원으로 약 1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단기매매증권은 1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는 증권으로, 보통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매도가능증권은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보유하는 증권을 뜻한다.

저축은행은 수익성 다변화와 동시에 부실자산 정리에도 속도를 낸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전국 79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에스비 엔피엘(SBNPL) 대부’를 통한 부실채권 매각 수요 조사를 진행 중이다. SBNPL 대부는 지난해 5월 설립된 저축은행중앙회의 부실채권 전문관리 자회사로 올해 초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

업계는 SBNPL 대부를 통해 총 1050억원의 부실채권이 매입·처리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설립 자본금 5억원에 유

상증자 100억원이 더해지면서 SB NPL 총자본금이 늘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대부업체의 자산은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할 수 없는데, 이번 증자로 최대 1050억원까지 부실 채권을 사들일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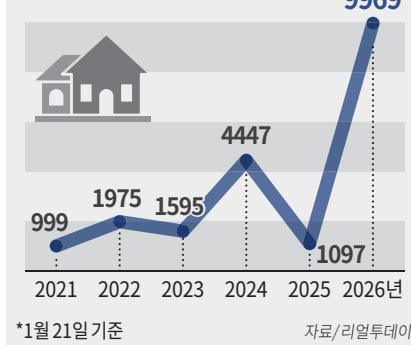
이처럼 저축은행이 자산 포트폴리오 재편에 나선 것은 여수신 중심의 본업만으로는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결과다.

저축은행 예수금은 지난 2024년 9월 말을 기준(102조5683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99조 5158억원)까지 지속 감소해 왔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영향으로 지난해 9월 예수금이 105조원164억원으로 일시적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 지난해 12월 99조원까지 추락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1분기 서울 분양물량 추이

단위: 가구 수



1분기 서울 아파트 1만 가구 쏟아진다

총 12곳… 청약 경쟁률 높을 듯

올해 1분기 서울에서만 1만 가구 안팎의 아파트 분양 물량이 나온다. 강도 높은 규제에도 서울 주요 지역의 분양 단지는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물량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2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서울에서 예정된 분양은 12곳, 9969가구(공공·민간분양 합계, 총 가구 수 기준)로 집계됐다. 1분기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지난 2021년에는 999가구에 불과했으며 ▲2022년 1975가구 ▲2023년 1595가구 ▲2024년 4447가구 ▲2025년 1097가구 등이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지난해 내내 이어진 규제와 가격 변동 속에서도 서울은 ‘분양 불패’ 흐름을 이어왔다”며 “올해 1분기 분양 단지들 역시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동시에 몰리며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인뱅-지방은행 협업, 개인사업자 대출 선점

토스-광주, 케이뱅크-경남 맞손
중저신용자 대상 공동대출 나서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서비스가 본격화되면서 중저신용자 확보를 둘러싼 인터넷전문은행 간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주요 플랫폼들이 관련 약관 정비를 마친 가운데, 인터넷은행은 지방은행과의 공동대출 등을 앞세워 갈아타기 수요 선점에 나설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주요 플랫폼은 약관변경 등을 통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준비를 마쳤다. 대출 갈아타기는 더 낮은 금리나 유리한 조건(상환방식, 만기 연장 등)의 대출로 변경해 이자부담을 줄이거나 재정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중저신용자 확보가 필요한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본격적으로

갈아타기 고객 유인에 돌입할 태세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대출을 준비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광주은행과 2024년부터 개인 신용대출 공동대출인 ‘함께대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경우인터넷전문은행은중저신용자 취급 확대에 따른 자본 부담을 낮추

면서도 갈아타기 수요를 흡수할 수 있고, 지방은행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규 개인사업자 고객을 확보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역시 지방은행과의 협업대출을 통해 기업·개인사업자 금융을 확장했다. 케이뱅크는 경남은행과 손잡고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대상 공동대출을 출시하며 중저신용자 포용 범위를 넓혔고, 카카오뱅크도 전북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중금리 개인사업자 대출을 공급했다.

/나유리 기자